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Article

북·러 동맹, 한반도에 '독'인가 '약'인가?

우제민

석사과정, 러시아·CIS 정치 전공
dnwpals12@hufs.ac.kr

윤석열 정부의 외교 'ABC' 정책

2022년 5월, 이미 전쟁의 화마(火魔)가 우크라이나를 뒤덮었을 무렵, 유럽 대륙 반대편 극동의 대한민국에서는 권력 변동이 발생했다. 윤석열 신정부는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반대로 바꾸는 소위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펼쳤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가 그랬다.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 제재에 대한 접근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북·중·러와의 관계에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동맹국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공고한 연대를 중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가치 외교'는 '균형 외교'의 포기를 의미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은 한·미·일 연합 체제 강화와 군사 협력 확대를 본격화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시간 미사일 정보공유, 연합훈련 확대, 확장억제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힘에 의한 평화'

기조하에 대북 킬체인(Kill Chain)과 선제타격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반도는 신냉전이 도래했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북·러가 쏘아 올린 한반도 신냉전

한·미 동맹의 강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러의 밀착을 야기했다.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은 전격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하 신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신우호조약은 북·러 관계의 질적 발전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이 보인 반러적 행보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띤다.

북·러 신우호조약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제4조의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 조항이다. '안보 조항'으로 일컬어지는 제4조는 1961년 조·소 동맹조약의 '자동 군사개입'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북·러 군사동맹의 복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런 우려는 한·러

관계의 긴장과 남북 갈등의 고조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었다.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결합은 동아시아에서 모호하던 진영의 경계선을 더욱 선명히 드러냈다.

[그림1] 2024년 북러 정상회담



(출처: 연합뉴스)

북·러 신우호조약, 어떻게 볼 것인가?

북·러 관계의 재조정이 최근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북·러의 전략적 연대 강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안보적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북·러 신우호조약을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설명한 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우려와는 반대로 러시아가 한반도 군사 긴장의 완충 역할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내 정치적 권력 투쟁에서 추동되는 남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일정 수준 억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신우호조약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북한에 러시아는 ‘전략적 헛징’의 핵심 파트너로서 다양한 국익을 제공해 준다. 세계적 권력보유자 러시아의 배후 세력화는 북한의 안보에 도움이 되고, 김정은의 한반도 정세 주도권 장악에도 기여할 수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 또는 무력화도 기대할 수 있다. 숨통을 죄어오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디기 위한 ‘산소호흡기’로서의 가치도 있다. 식량과 에너지 확보가 절실하고, 평양의 재정 확충을 위해 북한 노동자 파견이 긴요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구세주로 다가온다.

대러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의존성을 낮출 수 있고, 임박한 트럼프 신정부와의 북핵 담판에서도 ‘몸값’을 높일 수 있다.

한·러 관계의 혼풍을 기대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진영화와 심화되는 군사적 긴장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러의 밀착이 우리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이 북한 중심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 가운데 훼손된 한·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라고 본다. 러시아 역시 우리 정부와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만큼,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폭넓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한국에 러시아의 영향력은 변수보다는 상수에 가깝다. 국력의 총합으로 볼 때 러시아가 ‘갑’이고 한국이 ‘을’인 바, 한·러 관계에서 꼬인 매듭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미 동맹에 편승한 ‘쉬운’ 외교가 한국의 국익과 한·러 관계에 적지 않은 손상을 가했다. 이제는 특정 강대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줄이고 스스로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면서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어려운’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상의 이치처럼 기회는 항상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림2] 북극항로



(출처: 매일신문)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국경선을 맞댄 '쉽지 않은' 이웃이다. 그렇지만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숙명성을 지닌 세계적 강대국이다. 러시아는 에너지, 북극 개발 및 항로, 식량안보, 수산물, 철의 실크로드 등 미·중·일과는 차별화된 영역에서 21세기 한국의 국가적 번영에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심지어 통일도 러시아를 배제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올 1월 출범한 트럼프 신 정부의 대러 포용정책이 한·러 관계에도 훈풍을 불어오길 기대해 본다.

후원 ·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주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 CIS학과

발행인 ■ 제성훈 편집인 ■ 장여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cs@hufs.ac.kr TEL ■ 02-2173-2556